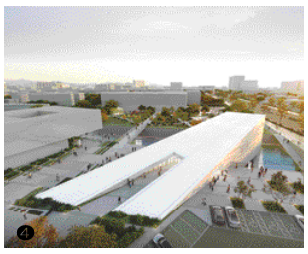
옛 종합경기장 일대, 전주 경제 새 거점된다… 첫 삽을 뜬 전주컨벤션센터

전주의 문화·관광·경제가 '한 곳에'

지난 반세기 이상 전주의 심장부였던 옛 전주종합경기장 일대가 전주컨벤션센터 건립공사를 시작으로 문화와 관광, 마이스산업, AI 기반 콘텐츠 등이 한데 어우러진 전주경제의 새로운 거점이 된다.

시는 이곳에 다양한 마이스산업 인프라와 문화시설 등을 집적화해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꿈틀거리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미래 광역도시 전주의 100년을 책임질 경제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❶전주컨벤션센터 조감도
❷관광호텔 조감도
❸전주시립미술관 투시도
❹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조감도

호텔·판매시설 등 마이스 인프라 속속 건립
시립미술관·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관도
사람 모이고 경제 꿈틀거리는 공간으로 탈바꿈

▲컨벤션센터·호텔 등 마이스 인프라 집적화

전주시는 강한 경제 전주의 심장부이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주컨벤션센터를 기반으로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중심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핵심 시설인 전주컨벤션센터는 1만㎡ 전시장과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 22개 중소회의실 및 회의 공간, 1만㎡ 규모의 다목적 광장 등을 갖추고 오는 2028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이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국제회의와 전시, 세미나 등 대형 마이스 행사를 유치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는 전주컨벤션센터와 더불어 호텔과 판매시설 등 다양한 마이스 지원시설이 갖춰지게 된다.

특히 호텔과 판매시설은 최신 시설로 갖출 계획이며, 인허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앞으로 전주형 마이스산업을 뒷받침하게 된다.

▲한문화의 중심, 전주의 문화가 모인다!

옛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는 전주컨벤션센터 등 마이스산업 인프라와 더불어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과 전주시립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공간도 속속 들어설 예정이다.

최근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뜬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은 옛 야구장 부지에 오는 2027년까지 국비 247억 원 등 총사업비 403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7367㎡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건물 지하 1층에는 △공공제작 콘텐츠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주제전시관 △국내외 우수 미디어 콘텐츠를 선보이는 기획전시실 △몰입영상관(5면)이 갖춰진다.

또 매표소와 카페(1층), 사무공간과 콘텐츠 제작지원실(2층)이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전시관이 개관하면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매력적인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창작자에게는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는 복합문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AI를 활용해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G-타운'과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문화시설 집적화를 통해 시민과 마이스 관광 등 전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인 전주만의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만끽할 수 있다.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움직이는 전주의 심장부로!

전주 교통의 대동맥인 기린대로와 백제대로가 만나는 곳에 자리한 전주종합경기장은 오늘날에도 전주의 교통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1963년 시민들의 성금이 모여져 만들어진 이후 증축을 거쳐 지난 60여 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체육 거점으로도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이곳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가 펼쳐져 많은 시민들이 추억을 만들어왔다.

시는 앞으로 전주컨벤션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마이스 기반 시설과 관광 인프라, 문화시설들이 갖춰지면 1년 내내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람이 모이면 경제가 살아 숨 쉬고, 이는 곧 산업으로 연결된다. 시는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산업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전주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 축을 갖게 된다.

전주의 중심부에 위치한 전주마이스복합단지를 찾는 발길은 덕진공원과 팔복예술공장, 한옥마을, 아중호수 등 전주 전역으로 이어지기 용이하다.

무엇보다 전주에 마이스 거점시설이 생기면서 전주시뿐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규모 있는 국내외 행사를 자신감 있게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게 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앞으로 전주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전주 고유의 역사문화 자산과 친환경 인프라,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해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마이스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확대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농식품부·행안부 공동사업화
국비 비중 확대·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등 대안 제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비판하며 사업 규모 확대와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국정과제 선정은 의미가 크지만, 정부가 내놓은 시범사업 계획은 규모·방식·내용 모두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업이 전체 농어촌 인구의 2%에 불과하고, 국비 부담을 40%로 제한해 나머지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예산을 절감하려다 지역 간 경쟁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가 도비 지원을 거부하거나 농민수당 삭감으로 재원을 마련하려는 사례를 들어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대안으로 △농식품부·행안부 공동사업화 △국비 비중 확대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을 제안하며 "정부 의지만 있다면 사업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넓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형 물 관리 전략 세워야"

김희수 도의원, 선제적 가뭄 대책 마련 촉구
"특정 시기 문제 아닌 상시적인 위협" 경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 더불어민주당)이 기후위기 시대, 물 부족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가 선제적인 가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역설했다.

24일 김희수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물 안보를 위해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 전환을 주문하며, 다가올 물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겨울, 전북지역 주요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54.7%에 그쳐 봄 영농철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가뭄이 특정 시기의 문제가 아닌 상시적인 위협으로 자리 잡았음을 경고했다.

전북자치도의 연평균 강수량(1,327mm)이 전국 평균(1,306mm)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약 56%가 여름철(6~8월)에 집중돼 겨울철 가뭄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강릉에서 겪었던 극심한 가뭄 사태는 전북에서도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는 현실이라며,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심각성은 데이터에서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자료를 인용, 지난 2023년 기준 전북자치도의 1인 1일당 물 사용량(427리터)과 급수량(413리터)이 전국 17개 시·도 평균(사용량 382리터, 급수량 378리터)을 크게 웃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고 또는 네 번째로 높은 수치로, 김 의원은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풍족하게 물을 사용해 온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가정에서의 절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며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

먼저, 지자체와 가정에서의 절수 노력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가정에서 손쉽게 절수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절수형 변기로의 교체를 제안했다.

또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북자치도 내 빗물이용시설은 264개소, 총 1억7,000만 리터 규모로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이 의무 설치 대상에 편중되어 있다.

끝으로, 수자원 저장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수천억 원 이상의 예산과 막대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발생하는 기존 대형댐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도심형 빗물 저류시설 건설'과 '지하수저류댐 대상지역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지하수 저류댐은 지하에 차수벽을 설치해 지하수를 저장, 증발로 인한 물 손실이 없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희수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번에 제안한 다양한 수자원 확보 방안을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다가올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영호남 국회의원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최적지"

오늘 남원 유치 촉구 나서기로

영호남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제2중앙경찰학교의 전북 남원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영호남 국회의원들은 25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중앙경찰학교가 국가 균형발전과 영호남 상생협력의 상징적 기관이 될 수 있다며 전북 남원이 최적지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함께 참석한다.

이들은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국가기관으로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교육기관의 합리적 분산 배치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할 계획이다.

남원은 영호남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166만㎡ 규모의 후보지 대부분이 유휴 국유지여서 예산 부담이 적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들어설 경우 △국가 균형발전 기여 △영호남 상생협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박희승 의원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과 맞닿아 있는 과제"라며, "영호남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문승우 도의회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에 전북 현안 해결 지원 요청

국회-지방의회 시도의장단 토론서 제안… 지역발전 탄력 기대
문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수석부회장 선임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새만금 개발 지원, 전북특별법 국가 재정지원 특례 의무화,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자유토론 자리에서 지역의 인구감소와 정책적으로 소외된 어려운 현실 등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전북 지원을 위한 입법 노력을 요청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주요 SOC 사업의 일괄 예타 면제, 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지원 요청과 동시에 전북특별법상 국가의 재정지원 특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을 제정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의 장을 정례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승우 의장은 "국회의장님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자유롭게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국회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곳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승우 의장은 그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으며, 협의회장으로 선임된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과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승우 의장은 "중책을 맡은 만큼, 전북도의회 의장의 직무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의 뜻을 한데 모으는 것에도 힘써 지역의 균형성장과 지방자치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단체, 우수 선진지 답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단체(대표의원 김이재 의원)가 24일 크루즈 산업 활성화 우수 선진지 답사를 위해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단체 위원들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서 입국장,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출국장, 크루즈 접안 부두 등을 견학했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의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인천형 테마크루즈 운영, 기항지 관광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정책과 크루즈 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만호 기자